



박수치는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환호하는 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후 도청 윤선도를 북카페에서 도민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전남 지역민 “민생 안정 통해 통합·화합 이뤄내야”

제21대 대통령에 바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 당선인에게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통해 통합과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3일 광주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임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안정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란 지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시민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실업을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내란세력 청산 1순위 과제

“이념·세대·지역·젠더 갈등 해결 절실”

인구 소멸·고령화 대책...탕평 인사도

시급한 민생 안정을 이룬 뒤에는 이념·세대·지역·젠더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극화

를 극복하는,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과 제도로 청산돼야 한다”며 “그다음이 민생 문제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경제 회복에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처장은 또 “지역 인구 소멸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권 초기에 지방 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특히 호남 지역의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소한 정책적인 것들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공약들을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했는데 분

인들이 약속한 지역 공약만큼은 최대한 임기 내에 실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림이 크다.

강 전 총장은 “우선 소통과 통합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튼튼한 국가 안보, 민생 경제 부흥과 평화 실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 차별이 아닌 혁신적 지역분권국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문화에 기반한 문화경제 대국을 이루기 위해 과학과 기술, 그리고 교육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전 총장은 “국가 안보, 민생경제 부흥, 평화 실현, 지역분권국가, 문화대국, 과학·기술·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에 지역, 학력, 연령, 성별

에 관계 없이 유능한 인재를 찾아 활용하는 인사가 만사가 되는 인사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균형감 있는 탕평 인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 내수 시장 위축, 연금 고갈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새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광주시민 황모(80)씨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게 된 것”이라며 “당선인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진수·변은진·양시원기자

姜시장 “광주시민 열망 투표율 1위 결과”

市·교육청·자치구, 투표독려 캠페인 성과

광주지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3.9%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권자 119만4천471명 중 100만2천1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투표율 88.9%,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지역은 12·3 비상계엄 이후 '1980년 오월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사회 전반의 재평가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 분

열된 국론 통합, 민생 최우선 회복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의 열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시·교육청·5개 자치구의 '투표가 힘입니다-투표 참여 캠페인'이 투표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12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율 92.5%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전 세대 맞춤형 캠페인을 지역 각계에서 진행했다.

거소투표소 확대 등 6대 실천 약속을 발표한 이후 18세 생애 첫 투표 등 1020 청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비롯해 택배·배달 노동자 등

노동자 투표 근무여건 조성, 이주여성, 경제계, 교육계 등 더 많은 시민이 더 편하게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투표 참여 기반을 조성했다.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지역 발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투표율 전국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루고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차기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58.2%·용산 15.4%”

국민 절반 이상이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로 청와대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이날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8.2%가 청와대를 선택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15.4%), 세종시(13.9%), 정부서울청사(3.6%) 순이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0%로 집계됐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선택한 응답자가 36.7%로 가장 많았다.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은 24.8%였으며, '2028년 총선 이후'는 10.8%

로 나타났다. '모르겠다'와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20.4%와 7.3%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권력구조를 묻는 조사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42.7%)와 '대통령 5년 단임제'(41.7%)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의원집정부제는 6.4%, 의원내각제는 1.8%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였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p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축하합니다

SINCE 1991



무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노은준



무안농업협동조합